

‘보훈의 달’ 맞아 경기도 찾은 與 지도부… 도내 준 보훈병원 적극 지원 약속

‘보훈 위탁병원 확대요청’에
여당 지도부 “알겠다” 화답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 경기도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내 준 보훈병원 확대를 위한 지도부 차원의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경기도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도내 준 보훈병원 수를 늘릴 예정인데, 지도부 차원의 예산 등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유의동 도당위원장에게 “알겠다”고 화답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해 (지도부가) 경기도를 방문해 주셨다”며 “도는 북부 휴전선은 물론 서해에 이르기까지 최전방을 지키는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이 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사에서 현장최고위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기현 대표(오른쪽)와 유의동 경기도당 위원장.

특히 “도에만 32만 명의 보훈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보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도 “도의 경우 보훈병원이 없어 서

울로 원정 진료를 가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올해 초 지방의료원을 준 보훈병원

으로 지정해 경기도의료원 산하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유 위원장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산업이 팹택·동탄·용인·이천 등에 집중돼 있다며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줄 것과 GTX 등 도내 교통망 사업, 돌봄교육, 농촌 정책 등의 지도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회의 참석에 앞서 수원에 위치한 프랑스군 6.25 참전 기념비에 둘러 참배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호국 보훈의 달 첫날 경기도 수원에서 현장최고위를 개최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전몰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본 의식을 되새기는 의지를 키워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 손상 구멍타이라는 괴담을 조작한 세력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주간 민주당이 후쿠시마 관련 당 차원 메시지를 낸 것이 무려 35번에 달한다”며 같은 기간 간호법 관련 13건, 김남국 코인 사태 관련 2건의 메시지를 낸 것과 비교했다.

김 대표는 “도를 넘는 반이성적 괴담 선동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어린이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과학이 아닌 괴담을 통해서 불안감을 키우는 구태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김한별 기자

尹, 이르면 이번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소폭 개각’도 거론

보훈부·동포청 등 신설 부처와
소폭 인적개편 함께 발표될 수도
‘총선 출마’ 대통령실 개편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 인사도 예정돼 있어 소폭의 인적 개편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 방통위원장 지명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임기를 두 달 앞두고 만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별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방통위원장 지명 발표는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인사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현직 국가보훈처장인 박민식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설되는 부처 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내년 총선에 맞춰 다른 부처까지 일부 교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아온 권영세 장관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국회 복귀설이 나온다.

권 장관은 지난달 1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조만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관련해 “장·차관 중에서 원래 당에서 시작했던 분들은 언제든 다시 돌아가서 내년 총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취임 2년 차에 접어들어 이달 하순부터 윤 대통령의 연쇄 정세외교 일정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인적 개편을 하기에 적기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여야 대치 정국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쇄신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 차관급 교체를 통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꾸려진 차관 인선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 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박일준 당시 산업부 2차관을 경질하고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을 임명한 이후 다른 차관급 인사는 단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 내에서도 일부 참모진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사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정성호 “형사사법체계 불안정성 책임 정부·여당에”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장은 1일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평과 수사 실무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명확히



정성호 국회의원

이었다. 정 위원장은 당시 특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자는 의견에 따라 활동기한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23일 현재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음에도 국민의힘은 4월 4일 회의에 불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상위법 취지에 위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지난달로 활동기한 종료

지난 1월 특위활동기한 연장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막 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사법특위 활동기한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어제 사법특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은 커녕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전처리 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법특위는 당초 지난 1월 30일 종료 예정

반하는 시행령 동치야말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정은 공전을 되풀이한 특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국민기본권 보장과 공공안녕과 정의수호의 관점에서 후속 입법에 애써주시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0일 특위 위원장 선출 후 9개월간 국회사무처가 편성한 위원장 활동비 등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반납 조치하거나 수령을 거부했다.

또 매월 세비에 포함돼 지급된 직급 보조비 전액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에 의연금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김한별 기자

서울의 중심에서 만나는 효율적인 광고 매체, 경기신문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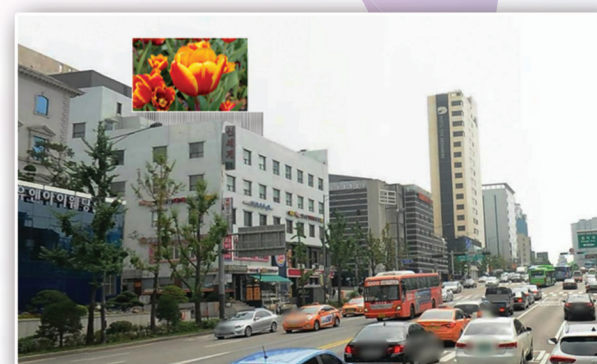
전광판광고 문의 031) 268-8330



KTX 서울역 (고가도로공원) 앞 남대문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2-6 (남대문로5가) 덴탈아트빌딩



시흥IC 신림역 → 서울대, 사당역 방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원로 1633 (신림동) 청도빌딩 8층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 합정역 방향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0 (서교동) 안오빌딩